「韓國식민지배」對日 첫소송

정신대 보상등 3개項 요구

민간법률구조회 29일 東京地法에 내기로

1992. 8. 14 동아

1992. 8. 19

방이후 최초로 日本의 韓國식민지배 전반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는 對日 소송이 제기된다.

국내 1백40여명의 변호사들이 가입한 對日민간법률구조회(회장 池益均)는 日本정부에 대해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오는29일 東京지방재판소에 내기로 했다.

국내 생존피해자 3백여명의 소송대리인, 자격의 대표변호사와 생존피해자 등 20여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이번 소송은 승소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韓日양국정부의 정책방향과 국내외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측은 △불평등 조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韓日합병의 불법성 △36년의 식민지배기간 동안 日本이 행한 정신대, 강제징용등 민간피해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식민지배가 南北분단등 韓國현대사에 미친 폐해등 3개 분야에 걸쳐 日本의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원고측은 우선 韓日합병과 관련, 1904년부터 1910년 사이에 모든 조약의 국제법적 불법성도 인정한적이없다.

원고측은 또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 진상규명책임이 日本정부에 있음을 입증, 관련문서와 자료의 공개를 강제하는 「제출명령 신청」을 낼 방침이다.

원고측은 특히 태평양전쟁 기간중 日帝에 의해 징용당해 숨진것으로 추정되는 40여만 희생자의 유골 반환 책임이 현 日本정부에 있음을 법적으로 규명, 유골의 반환을 청구할 계획이다.

원고측은 또 日帝통치기간중 행해진 민족문화말살 정책과 기독교탄압등 종교탄압 정책에 대한 日本정부의 사죄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원고측은 이번 재판에서 해방전후 사료를 통해 日本의 식민지배가 南北분단의 근본적 원인이었음을 주장하고 이에대한 日本정부의 사과와 배상도 청구한다.

對日민간법률구조회측은 이번 재판에 대비, 지난해 말부터 법적증빙자료와 피해자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국제법전문변호사들의 도움을 통해 재판준비를 해왔다.

45년 징용한인 귀국선 폭발·침몰 사건

일 정부에 진상규명 소송

유가족 24명 내일 일본으로

1992. 8. 19

【청주=진재학 기자】 1945년 일제 패망 직후 조선인 징용자 7천명을 태우고 한국으로 향하다 일본 교토 인근 마이쓰루만에서 의문의 폭발과 함께 침몰한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가족 24명이 일본 교토지방재판소에 우키시마호 사건 진상규명과 일본정부 사과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20일 일본으로 떠난다.

김동천(70·충북 영동군 심원리)씨 등 충북 영동과 광주지역 희생자 유가족들은 오는 25일 교토지방재판소에 소장 제출에 이어 47년전 우키시마호가 침몰한 마이쓰루만을 방문해 희생자 추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우키시마호사건은 45년 8월24일 일본 아오모리군항에서 조선인 징용자 7천여명을 태우고 한국으로 향하던 일본 해군특무함 우키시마호가 교토 인근 마이쓰루만에서 일본군의 자폭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폭발과 함께 침몰한 사건으로, 5백여명이 숨졌다는 일본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3천~5천명 가량의 조선인 징용자가 희생됐다는 주장이 일본과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다.